

#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 집단을 중심으로

곽윤경<sup>1</sup> | 양영미<sup>2\*</sup>

<sup>1</sup>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up>2</sup> 한국사회융합연구소

\* 교신저자: 양영미  
(ksci.ymy@gmail.com)

##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이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들 이주민 유형별로 다문화 수용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사회적 자본의 하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성인 남녀 3,011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 신뢰와 공적 신뢰는 난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이주노동자와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별, 세대, 교육 수준, 주관적 소득계층, 외국인 접촉 빈도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다문화 수용성에 유형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주민 집단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 용어:** 사회적 자본, 다문화 수용성,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 사회통합

##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선행연구들은 이주민 집단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뿐,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 등 이주민 세부 유형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별적 구조와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이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 중 사회 신뢰와 공적 신뢰가 난민에 대한 수용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주노동자와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이 이주민 전체에 대해 동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이주민 유형에 따라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 태도는 달라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 세대, 주관적 소득계층, 교육 수준, 외국인 접촉 빈도 등이 이주노동자, 난민, 그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주민을 동질적 집단으로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 이주민 유형별 정책 설계와 더불어,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국민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사회 신뢰와 공적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동체 기반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인식 개선과 정책 설계가 요구되며, 국민과 이주민의 접촉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투고일: 2025. 04. 29.

■ 수정일: 2025. 07. 17.

■ 게재확정일: 2025. 07. 30.

## I. 서론

UN 경제사회국(DESА)에서 발표한 ‘2024년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 237개국 총 인구는 80.9억 명을 넘어서고 있다(United Nations DESA, 2024). 그 중 2억 8,100만 명은 국제 이주민으로 전 세계 인구의 3.5%에 달하고 있으며, 1억 1,700만 명은 재난과 분쟁, 갈등, 폭력 등의 이유로 이주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United Nations DESA, 2024).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024년 기준 265만 0,783명으로 전년에 비해 5.7% 증가한 수치이며, 체류 외국인 비중 또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5.1%를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2025).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56만 명), 난민(1만 8천 명), 결혼이주민(18만 명), 국내 유학생(26만 명), 재외동포(86만 명) 등 이주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법무부, 2025). 이러한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보고한 것처럼 우리나라 이주민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5.0%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는 이주민 비중과 인종적 다양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체류 외국인들의 사회통합 정책과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과 같은 이주민을 포용하는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유학생, 결혼이주민 등 특정 집단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법무부, 2024). 특히 인종과 국적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 등 체류 국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법무부, 2024).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주민에 대한 낮은 다문화 수용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의 국내 유입에 대해서도 여전히 배타적인 정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정동재, 2023). 아울러 법무부(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2012년 이후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인은 2015년 이후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이 사회 여론 형성이나 정책 결정, 제도적 실천 등 공적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행위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갖는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갈등, 차별 등을 야기할 가능성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법무부,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다문화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연령층인 아동,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황정미, 2010; 이형하, 2014; 김이선 외, 2022), 성인 집단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곽윤경, 2020). 따라서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담론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예컨대 장기간에 걸친 이민 역사를 바탕으로 한 북미 국가들은 평등과 인권에 기반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다문화 수용 정책을 발전시켜 왔으며(Kymlicka, 2003), 반면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주의적 정체성이 지배적인 사회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문화 수용보다는 제한적인 다문화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윤인진 외, 2015; 이소현, 2023).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수용성은 단일하고 보편적인 개념보다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및 정서적 맥락을 고려한 사회문화적 바탕 속에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이주민에 대한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이희창, 2023), 이는 이주민을 한 국가의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려는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윤인진, 팽정, 2021). 특히 다문화 수용성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이재철, 2017), 이주민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허거훈, 정혜진, 2020; 이소현, 2023).

그러나 다문화 수용하는 정도는 이주민 집단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김이선 외, 2022; 이정연, 엄재근, 2019; 윤인진 외, 2015). 이주민들은 서로 다른 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현재의 국가에 편입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질적인 집단이다(윤경훈, 강정인, 2019). 그 중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는 문화적·제도적·정서적인 다문화 수용성 측면에서 갈등과 편견, 인권침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노충래, 홍진주, 2006; 김희재, 김현숙, 2012). 예컨대 이주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 내에서 저숙련·저임금 노동자들이 대다수로, 이들은 일자리 경쟁과 임금 등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높은 집단이며(박지한, 김동현, 2024), 여성가족부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는 이주노동자들과 접촉 정도가 가장 많은 저소득층 노동자들 또한 이들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이선 외, 2022). 난민 또한 인도주의적인 수용과 사회적 비용의 충돌로 인해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난민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으며(김정숙, 2023), 이와 같은 난민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는 다문화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chweitzer et al., 2005). 다른 한편 재외동포는 다른 이주민과는 다른 특수한 정체성이 작용하는데, 즉 한민족공동체 일원이라는 강한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같은 민족이지만, 이방인’이라는 모순된 인식 속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윤인진 외, 2015). 그렇지만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할수록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윤인진 외, 2015). 이처럼 이주민 집단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정체성과 사회적 인식은 다문화 수용성의 양상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다문화 수용성을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다문화 수용성은 이주민 전체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한 포괄적 분석보다는,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와 같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구분하여 유형화된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볼 수 있다.

한편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적 자본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신뢰, 네트워크, 규범, 호혜성 등을 주요 동력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단체 참여를 통하여 관계성과 화합이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허윤철 외, 2017; 이희창, 2023). 특히 사회적 자본이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고하고 있다(Putnam, 2007; Herreros and Criado, 2009). 무엇보다 사회를 신뢰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다른 문화와 배경을 지닌 이주민에게까지 신뢰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국 이주민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다문화 수용 정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이재철, 2017; Herreros and Criado, 2009).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 태도와 인식 등(양계민, 2010; 김혜선, 2014; 윤인진 외, 2015; 이재철, 2017)과 도시-농촌 간 비교, 특정 지역 내 비교, 지역과 국가 수준 비교,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 비교 등(허윤철 외, 2017; 전경숙, 2021; 이소현, 2023; 장주영, 허정원, 2024)을 탐색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로 세분화하여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을 살펴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이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이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 수용성

최근 우리나라도 다양한 문화적·인종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문화 수용성 대한 이론 및 정책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허거훈, 정혜진, 2020; 이희창, 2023; 우명숙, 남은영, 2024; 장주영, 허정원, 2024). 이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Simmons et al.(2010)은 다문화 수용성을 타문화에 대한 평등을 지향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다양한 인종 및 민족에 긍정적인 태도라 하였으며, Ojukwu와 Oni(2017)는 다양성과 형평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다른 문화와 공존하며 서로 협력하는 태도라고 보았다. 또한 Ramakrishna(2013)는 서로 다른 문화의 정체성 차이를 수용하고 공존하는 태도라 정의하였으며, Rosado(1996)는 다양한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신념이라 정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은 다양한 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들을 지역사회에 한 주민으로서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이재철, 2017; 윤인진, 팽정, 2021). 이에 대하여 허거훈과 정혜진(2020)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이주민에 대한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라 하였으며, 민무숙 외(2010)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다른 인종과 문화에 편견을 갖지 않고 상호 협력하며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라 보았다. 또한 안상수 외(2012)는 선입견 없이 이주민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라 보고하였으며, 이재철(2017)은 다문화 수용성이 국가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 거부감이 적은 것이라 말하면서, 편견 없이 타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라 하였고, 곽윤경과 양영미(2017)는 다양한 인종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라 정의되고 있다. 이처럼 앞선 연구들은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협력적, 포용적, 관용적 태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허거훈, 정혜진, 2020; 이소현, 20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이주민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서로 공존하며 협력하는 관용적인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어떠한가? 내국인들은 이주민들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내국인을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위험 집단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우명숙, 남은영, 2024; Burgoon, 2014).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살펴보더라도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여전히 배타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비율이 86.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23). 그러나 이주민 중에서도 이주노동자는 취업을 위하여 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유급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타지역에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의미한다(임혁, 이효영, 2012).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구성원으로서 편입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단지 결혼과 노동력에 따른 수용만 있을 뿐, 일상적인 접촉이나 공유, 이웃으로는 원하지 않는 인식이 강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안상수 외, 2015; 김진희, 2019). 무엇보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저숙련·저임금에 속하는 노동자로서, 우리나라 임금노동 종사자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일자리 경쟁과 높은 임금을 부추기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다(박지한, 김동현, 2024). 이로 인하여 일터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장소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김진희, 2019), 이주노동자 진출이 많은 단순 노무나 기능, 조립 등의 분야에서도 접촉 빈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안상수 외, 2015). 다음으로 난민은 비자발적 이민자로서 본국의 전쟁, 박해, 인권침해 등을 피해 다른 나라로 도피처를 찾는 사람을 의미한다(고문현, 2011). 난민 또한 2018년 예멘 난민의 제주도 입국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하면서 배타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김진희, 2019; 김현미, 2019). 하지만 2021년 미리클 작전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난민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김정숙, 2023). 특히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하여 Schweitzer et al.(2005)은 난민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역사적 등의 사유로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윤인진 외, 2015; 광민정, 함보연, 2023).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나 난민과는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는데,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외동포를 한민족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같은 민족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배타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서정경, 2014; 윤인진 외, 2015). 윤인진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65.6%가 재외동포에 대해 한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이 강할수록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 정도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신념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주민 집단에 따라 다른 인식 및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로 구분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 수용성은 성별, 세대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소득계층, 접촉 빈도, 지역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성별에서는 성인 남성이 여성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하위개념인 관계성 측면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상수 외, 2012). 또한 민무숙 외(2010)와 광윤경(2020)의 연구에서도 성인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집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에 대해서도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윤 외, 2014). 다음으로 세대별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반면, 장년층은 다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민무숙 외, 2010), 이는 연령이 젊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에서도 지지해 주고 있다(황정미, 2010; 이형하, 2014; 김이선 외, 2022). 반면 김지윤 외(2014)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노출이 빈번한 젊은 세대일수록 다문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에서는 고졸 이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황정미, 2010; 김이선 외, 2022), 전소희(2023)의 연구에서도 교육 수준과 다문화 수용성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은 사회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태도, 배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이형하, 2014; 이재철, 2017; 이희창, 2023),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불안과 압박으로 인하여 이주민을 수용하는데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신민형, 2015). 접촉 빈도 또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쳤는데, 신학진(2013) 연구에서는 중년 성인이 다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의 질과 인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는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이주민과의 직접 접촉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보영, 홍이준, 2021). 마지막으로 지역별의 경우 우리나라는 시·군·구 기준으로 외국인 수가 만 명 이상이거나, 외국인 비율이 총 인구의 10% 이상일 경우에 시·군·구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행정안전부, 2023), 읍·면·동 기준으로는 외국인 수가 5,000 명 이상이거나, 외국인 비율이 총 인구의 10% 이상일 경우에 읍·면·동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전경숙, 202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이주민들은 시·군·구에 비해 읍·면에 집중 거주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읍·면·동과 같이 이주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주민들은 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 다문화 수용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전경숙, 2021). 이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사회적 소수자인 난민 입국자, 이주민 등을 배제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사회학적 상황을 통제하더라도 여전히 도시 주민들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는 농촌 주민보다 낮게 나타났다(김이선 외, 2022). 무엇보다 이소현(2023) 연구에서는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에 비해 다문화 관용성이나 다문화 수용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시 주민들은 이주민과의 상호교류 의지가 약하고 거부 및 회피 정서가 강하며, 관계 형성에도 더 큰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주민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는 농촌 주민이 도시 주민보다 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이소현, 2023).

## 2.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사회적 자본은 1980년대부터 Leana와 Van Buren(1990), Putnam(1993), Herreros와 Criado(2009)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장시킨 학자라 할 수 있다. Putnam(1993)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 정의한 반면, Leana와 Van Buren(1990)는 사회적 자본을 개인에게 혜택이 발생하는 사유재적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혜택을 미치는 공공재적 사회적 자본으로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Herreros와 Criado(2009)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 협력과 화합, 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개념으로서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데, Putnam(1993)는 사회적 자본을 신뢰, 네트워크, 규범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으며, Bhandari와 Yasunobu(2009)는 신뢰, 네트워크, 참여, 호혜성으로 분류하였으며, 배영(2007)은 신뢰, 네트워크, 시민참여, 규범, 의무감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신뢰와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과 이주민 수용성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하위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객관적 차원인 신뢰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결속력과 사회 관계적 유대가 형성된다고 보았다(이형하, 2014; 허윤철 외, 2017). 특히 Herreros와 Criado(2009)는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개인들 간의 갈등이 적어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인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고하고 있다. 이는 타인을 신뢰할수록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적고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이재철(2017)의 연구와 일정 부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신뢰 영역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 대인 신뢰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는데, 김은미 외(2014)의 연구에서는 사적 신뢰를 가족, 이웃, 친구 등 개인적이고 밀접하며 친밀한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 공적 신뢰를 공공기관이나 제도, 사회 시스템 등 공식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뢰로 정의하고 있으며, Uslaner(2002)의 연구에서는 대인 신뢰를 외부 타인에 대한 사회적 대인 신뢰와 친척, 친구, 동료 등 동질적인 타인에 대한 사적 대인 신뢰로 구분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반면 Uslaner(1999)는 사회적 자본에서의 신뢰를 일반화 신뢰와 특정화 신뢰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일반화 신뢰는 규범, 윤리, 협력적 활동 등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신뢰가 강화되며, 특정화 신뢰는 사회적 및 경제적 활동 등을 통하여 한정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신뢰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주관적 차원인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으로서, 개인과 개인 간 혹은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체 및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이영찬, 2007; Putnam, 1993). 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들 간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는 인종적 편견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둘 이상의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신뢰 및 네트워크 관계를 통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자원 및 자산일 뿐만 아니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촉매제 역할로서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영찬, 2007; 이형하, 2014).

한편, 신뢰와 네트워크로 측정되는 사회적 자본이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서,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들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이형하(2014)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에서 사회적 신뢰가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윤철 외(2017) 연구에서는 신뢰와 호혜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erreros와 Criado(2009)

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선(2014)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와 공공 신뢰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이주민 집단과의 네트워크에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허거운과 정혜진(2020)의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희창(2023) 연구에서는 일반인 신뢰, 낯선 사람 신뢰, 제도 신뢰, 단체 참여가 이주민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재철(2017)의 연구 결과에서는 신뢰 중에서도 대인 신뢰가 다문화 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속형 단체 참여와 교량형 단체 참여는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자본은 이주민에 대한 한국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및 제도적 특성을 지닌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주민 집단 간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일반화하여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즉 이주민 집단을 유형화하여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형화한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관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사회통합 상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XI): 이주민과 사회통합」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매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는 500개 집계구를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한 후, 각 집계구 당 6개 가구를 계통 추출하여, 총 3,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한다(곽윤경 외, 2024). 이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면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2024년 6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전국 3,011명의 성인 남녀가 참여하였다.

#### 2. 측정변수

##### 가. 종속변수: 다문화 수용성

종속변수는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조사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이주민 대상별 다문화 수용성을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귀하는 1) 이주노동자, 2) 난민, 3) 재외동포(고려인, 조선족 등)를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나의 배우자 혹은 가족이 되는 것, 2=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이웃이 되는 것, 5번=받아들일 수 없음 등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를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정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 정현일(2023)의 연구와 같이, 1=받아들일 수 없음,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 혹은 가족이 되는 것으로 코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나. 독립변수: 사회적 자본

독립변수는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한 결과, 그 구성요소를 신뢰와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신뢰는 유형별로 사회 신뢰, 공적 신뢰, 대인 신뢰로 세부 구분하였다. 사회 신뢰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11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공적 신뢰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신뢰를 묻는 3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응답 중 '모르겠다'(9번)는 결측치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응답은 각 문항에 대하여 1=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2=다소 신뢰한다, 3=매우 신뢰한다고 역코딩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적 신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하위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적 신뢰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83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인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의 3개의 부정적인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네트워크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가족, 친척, 선생님, 친구 등)과 일상적인 고민을 나누고 타인과 감정과 정보를 나누는지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11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다. 통제 변수

성별, 연령대, 지역,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 소득분위, 접촉 빈도 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우선, 성별(남성=1, 여성=2)과 접촉 빈도(없음=0, 있음=1)는 더미 변수화하였다. 세대는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중년(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노년(만 65세 이상 75세 이하)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고교 중퇴 포함), 고졸(대학 중퇴 포함), 대졸 이상(대학 수료 및 대학원 포함)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상층)으로 구분하였다. 소득분위는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로 코딩하였다. 경제활동 상태는 상용직, 임시·일용·특고, 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자(=1), 실업자(=2), 비경제활동인구(=3)로 코딩하였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 및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으며, 설문 문항의 하위 요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요 변수들 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자료는 Stata MP 1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우선, 전체 연구 대상 3,011명 중 남성은 51.11%, 여성은 48.99%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29.16%이고, 비수도권 거주자는 70.84%로

비수도권 거주자가 약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였다. 세대별로는 중년이 59.9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청년이 23.88%, 노년층이 16.14%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50.28%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38.16%, 중졸 이하가 11.56%로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에서는 하층이 9.66%, 중하층은 34.97%, 중간층은 50.12%로 가장 많았고, 중상층(상층 이상)은 5.25%로 나타났다. 소득분위의 경우, 1분위는 22.68%, 2분위는 21.42%, 3분위는 17.27%, 4분위는 20.36%, 5분위는 18.27%로 나타났다. 접촉 빈도가 있는 사람은 75.89%로 상당수를 차지하였고, 접촉 빈도가 없는 집단은 24.11%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취업자는 72.37%, 실업자는 3.79%, 비경제활동인구는 23.85%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변수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539
	여성	1,472
지역	수도권	878
	비수도권	2,133
세대별	청년	719
	중년	1,806
	노년	486
교육수준	중졸 이하	348
	고졸	1,149
	대졸 이상	1,51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91
	중하층	1,053
	중간층	1,509
	중상층(상층 이상)	158
소득분위	1분위	683
	2분위	645
	3분위	520
	4분위	613
	5분위	550
접촉 빈도	있음	2,285
	없음	726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2,179
	실업자	114
	비경제활동인구	718
전체	3,011	100

## 2. 주요 변수 기술통계

주요 변수의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사회적 자본 중 사회 신뢰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5.15점(SD=1.80)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신뢰 평균은 1.36점(SD=1.53), 대인 신뢰는 5점 만점에 3.62점(SD=0.73)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10점 만점에 6.07점(SD=1.64)으로 보통 이상이였다. 다음으로 다문화 수용성 중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2.77점(SD=0.90), 난민 2.27점(SD=0.94), 재외동포는 2.73점(SD=0.91)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회적 자본	사회신뢰	5.15	1.80	0	10
	공적신뢰	1.36	1.53	0	3
	대인신뢰	3.62	0.73	1	5
다문화 수용성	사회적지지	6.07	1.64	0	10
	이주노동자	2.77	0.90	1	5
	난민	2.27	0.94	1	5
	재외동포	2.73	0.91	1	5

주: 신뢰 변수는 원점수 차이를 고려하여 z-score로 표준화하였음(평균=0, 표준편차=1). 사적 신뢰의 범위 [-2.86~2.69], 공적 신뢰[-0.81~3.62], 대인 신뢰[-3.57~1.88]

### 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회 신뢰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r=0.037, p<.05$ ), 난민에 대한 태도( $r=0.039, p<.05$ ) 그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 $r=0.040, p<.05$ )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신뢰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r=0.062, p<.01$ ), 난민에 대한 태도( $r=0.048, p<.05$ ) 그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 $r=0.072, p<.001$ )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r=0.071, p<.001$ ), 난민에 대한 태도( $r=0.071, p<.001$ ), 그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 $r=0.070, p<.001$ )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분석 결과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가 0.8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대인신뢰	1						
사회신뢰	-0.277***	1					
공적신뢰	-0.160***	0.255***	1				
사회적지지	-0.138***	0.227***	0.069***	1			
이주노동자	-0.032	0.037*	0.062**	0.071***	1		
난민	-0.026	0.039*	0.048*	0.071***	0.367***	1	
재외동포	-0.021	0.040*	0.072***	0.070***	0.470***	0.333***	1

\* $p<0.1$ , \*\* $p<0.05$ , \*\*\* $p<0.001$ .

### 4.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이주노동자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들은 아래 <표 4>와 같다. 모형의 설명력은 5.8%(Adj.  $R^2=0.051$ )였고, 모형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8.93, p<.001$ ). 회귀분석 결과, 이주노동자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먼저, 사회적 자본 중 사회 신뢰, 공적 신뢰, 대인 신뢰 그리고 사회적 지지로 측정된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 세대, 주관적 소득계층, 교육수준, 접촉 빈도 그리고 경제활동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주노동자에 대해 더 낮은 다문화 수용 태도를 보였다( $\beta=-0.136, p<.001$ ). 세대별로는 중년층( $\beta=-0.106, p<.05$ ),

노년층( $\beta=-0.246, p<0.001$ ) 모두 청년층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 세대 간 인식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즉 중하층( $\beta=0.132, p<0.1$ )과 중간층( $\beta=0.202, p<0.01$ ) 집단이 하층 집단보다 이주노동자 다문화 수용성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고졸( $\beta=0.131, p<0.1$ ) 및 대졸 이상( $\beta=0.213, p<0.05$ ) 응답자는 중졸 이하 대비 높은 다문화 수용 태도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beta=0.181, p<0.001$ ).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취업자( $\beta=0.115, p<0.05$ )는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이주노동자 다문화 수용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실업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사회적 자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변수	coef	std. err.	95% Conf. Interval	
사회적 자본	사회신뢰	0.010	0.010	-0.009 0.030
	공직신뢰	0.015	0.038	-0.059 0.088
	대인신뢰	-0.019	0.023	-0.065 0.026
	사회적 지지	0.019	0.011	-0.002 0.041
성별 (ref=남성)	여성	-0.136***	0.034	-0.202 -0.069
세대 (ref=청년)	중년	-0.106**	0.041	-0.187 -0.025
	노년	-0.246***	0.066	-0.375 -0.116
지역(ref=수도권)	비수도권	0.031	0.036	-0.040 0.102
소득분위 (ref=1분위)	2분위	-0.041	0.054	-0.147 0.066
	3분위	-0.095	0.060	-0.212 0.022
	4분위	-0.100	0.059	-0.216 0.016
	5분위	0.001	0.062	-0.121 0.123
주관적 소득계층 (ref=하층)	중하층	0.132*	0.061	0.011 0.253
	중간층	0.202**	0.063	0.079 0.326
	중상층-상층	0.172	0.095	-0.015 0.359
교육수준 (ref=중졸 이하)	고졸	0.131*	0.065	0.005 0.258
	대졸 이상	0.213**	0.071	0.075 0.352
접촉 빈도 (ref=없음)	있음	0.181***	0.038	0.106 0.255
경제활동 상태 (ref=비경활)	실업자	0.100	0.091	-0.078 0.278
	취업자	0.115**	0.042	0.033 0.198
상수	2.305	0.164	1.983 2.627	
N	2,929			
F/ p	8.93***			
R <sup>2</sup> (Adj. R <sup>2</sup> )	0.058( 0.051)			

\* $p<0.1$ , \*\* $p<0.05$ , \*\*\* $p<0.001$ .

난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들은 아래 <표 5>와 같다. 모형의 설명력은 4.2%(Adj.  $R^2=0.036$ )였고, 모형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6.43, p<0.001$ ). 회귀분석 결과, 난민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일부 사회적 자본 지표와 인구 사회학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먼저, 사회적 자본 중 사회 신뢰( $\beta=0.024$ ,  $p<0.1$ )와 공적신뢰( $\beta=0.086$ ,  $p<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신뢰가 높을수록, 공적 신뢰가 높을수록, 난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 세대, 지역, 주관적 소득계층, 교육수준, 그리고 접촉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난민에 대해 더 낮은 다문화 수용 태도를 보였다( $\beta=-0.091$ ,  $p<0.1$ ). 세대별로는 노년층( $\beta=-0.167$ ,  $p<0.1$ )이 청년층에 비해 난민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 세대 간 인식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거주자( $\beta=0.104$ ,  $p<0.05$ )가 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난민에 대해 더 많은 다문화 수용 태도를 보였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즉 중하층( $\beta=0.187$ ,  $p<0.05$ )과 중간층( $\beta=0.247$ ,  $p<0.001$ ) 집단이 하층 집단보다 난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대졸 이상( $\beta=0.214$ ,  $p<0.05$ ) 응답자는 중졸 이하 대비 난민에 대해 높은 다문화 수용 태도를 보였다.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집단( $\beta=0.082$ ,  $p<0.1$ )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5. 사회적 자본과 난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변수	coef	std. err.	95% Conf. Interval		
사회적 자본	사회신뢰	0.024*	0.010	0.003	0.044
	공적신뢰	0.086*	0.040	0.007	0.164
	대인신뢰	-0.028	0.025	-0.076	0.020
	사회적 지지	0.003	0.011	-0.020	0.025
성별 (ref=남성)	여성	-0.091*	0.036	-0.161	-0.021
세대 (ref=청년)	중년	-0.048	0.044	-0.134	0.037
	노년	-0.167*	0.070	-0.304	-0.030
지역(ref=수도권)	비수도권	0.104**	0.038	0.029	0.179
소득분위 (ref=1분위)	2분위	-0.014	0.058	-0.127	0.099
	3분위	-0.012	0.063	-0.136	0.112
	4분위	-0.004	0.063	-0.126	0.119
	5분위	0.027	0.066	-0.102	0.157
주관적 소득계층 (ref=하층)	중하층	0.187**	0.065	0.059	0.315
	중간층	0.247***	0.067	0.117	0.378
	중상층 상층	0.069	0.101	-0.129	0.267
교육수준 (ref=중졸 이하)	고졸	0.120	0.069	-0.015	0.254
	대졸 이상	0.214**	0.075	0.068	0.361
접촉 빈도 (ref=없음)	있음	0.082*	0.040	0.003	0.161
경제활동 상태 (ref=비경활)	실업자	0.028	0.096	-0.161	0.216
	취업자	0.069	0.045	-0.018	0.156
상수		1.690***	0.174	1.349	2.030
N			2,929		
F/ p			6.43***		
R <sup>2</sup> (Adj. R <sup>2</sup> )			0.042(0.036)		

\* $p<0.1$ , \*\* $p<0.05$ , \*\*\* $p<0.001$ .

재외동포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들은 아래 <표 6>과 같다. 모형의 설명력은 4.4%(Adj. R<sup>2</sup>=0.038)였고, 모형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6.76, p<0.001). 회귀분석 결과, 재외동포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먼저, 사회 신뢰, 공적 신뢰, 대인 신뢰 그리고 사회적 지지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은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 주관적 소득계층, 교육수준, 접촉 빈도 그리고 경제활동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beta=-0.104$ , p<0.05)은 남성에 비해 재외동포에 대해 더 낮은 다문화 수용 태도를 보였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즉 중하층( $\beta=0.174$ , p<0.05)과 중간층( $\beta=0.220$ , p<0.05) 집단이 하층 집단보다 재외동포 다문화 수용성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대졸 이상( $\beta=0.188$ , p<0.05) 응답자는 중졸 이하 대비 높은 다문화 수용 태도를 보였다.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집단( $\beta=0.171$ , p<0.001)은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취업자( $\beta=0.088$ , p<0.1)가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재외동포 수용성에 있어 유의하게 높았다.

표 6. 사회적 자본과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변수	coef	std. err.	95% Conf. Interval		
사회적 자본	사회신뢰	0.012	0.010	-0.008	0.031
	공적신뢰	0.071	0.039	-0.004	0.147
	대인신뢰	-0.019	0.024	-0.066	0.027
	사회적 지지	0.014	0.011	-0.008	0.035
성별 (ref=남성)	여성	-0.104**	0.035	-0.172	-0.037
	세대 (ref=청년)	중년	0.016	0.042	-0.067
	노년	-0.050	0.068	-0.182	0.083
지역 (ref=수도권)	비수도권	0.045	0.037	-0.028	0.118
소득분위 (ref=1분위)	2분위	0.033	0.056	-0.076	0.142
	3분위	0.035	0.061	-0.085	0.155
	4분위	0.021	0.060	-0.097	0.140
	5분위	0.084	0.064	-0.041	0.209
주관적 소득계층 (ref=하층)	중하층	0.174**	0.063	0.050	0.297
	중간층	0.220**	0.064	0.094	0.347
	중상층 상층	0.142	0.098	-0.050	0.333
교육수준 (ref=중졸 이하)	고졸	0.071	0.066	-0.059	0.201
	대졸 이상	0.188**	0.072	0.047	0.330
접촉 빈도 (ref=없음)	있음	0.171***	0.039	0.095	0.248
경제활동 상태 (ref=비경활)	실업자	0.079	0.093	-0.103	0.261
	취업자	0.088*	0.043	0.004	0.173
상수	2.050***	0.168	1.720	2.379	
N	2,929				
F/ p	6.76***				
R <sup>2</sup> (Adj. R <sup>2</sup> )	0.044(0.038)				

\*p<0.1, \*\*p<0.05, \*\*\*p<0.001.

## V. 결론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와 다문화 사회 진입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단위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자본은 전반적으로 난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사회 신뢰와 공적 신뢰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민과 같은 인도주의적 이주 집단에 대한 다문화 수용 여부가 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 전반의 신뢰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이재철, 2017; Herreros and Criado, 2009). 사회적 자본은 이와는 달리 이주노동자 다문화 수용성과 재외동포 다문화 수용성 간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나 구성요소가 특정 이주민 집단(예: 난민)에 더 밀접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난민은 언론 노출이 높고, 정치적·인도주의적 논쟁과 연결되기 쉬운 반면, 이주노동자와 재외동포에 대한 수용성은 경제적 기여도나 역사적 연관성과 같은 실용적·경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자본과 같은 일반적 신뢰 지표와의 연관성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 세대, 주관적 소득계층, 교육 수준, 외국인 접촉 빈도 등이 이주노동자, 난민, 그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성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이주노동자, 재외동포, 난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연구 결과(곽윤경, 2020; 민무숙 외, 2010; 안상수 외, 2012)를 뒷받침한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성별 간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 것에 그치지 않고, 성별에 따라 이주민 집단 유형별로 수용성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이는 향후 정책 설계 시, 단순한 성별 구분을 넘어, 이주민 유형에 따른 수용성의 맥락적 차이를 성별 관점에서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대졸 이상, 주관적 소득계층이 중하층과 중간층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졸 이상 집단, 즉 고학력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황정미, 2010; 김이선 외, 2022). 또한,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는 일부 조응하는 듯 보이지만, 여기서는 중상층이 아닌 중하층과 중간층이 하층 집단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나와, 기존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는 소득 상위 계층보다도 일정 수준의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한 중하층과 중간층에서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에 따라 더 포용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경제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많은 집단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안정성을 경험하는 계층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난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접촉 경험이 오히려 다문화 수용성을 높였다는 결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남보영, 홍이준, 2021; 신학진, 2013).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주민 유형별 맞춤형 정책 설계와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국민 대상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난민 다문화 수용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주노동자와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들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이 단지 신뢰나 지지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거리감, 고정관념, 또는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 사회에 이미 뿌리내린 핵심 노동 인력이지만,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적 제도,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의 부정적 이미지 재생산으로 인해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임양준, 2012; 한정훈, 2019). 이에 따라, 제도 개선과 국민 인식 제고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고용허가제의 불합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별 적정 인력 규모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의 이주노동자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다양성 교육과 대국민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학교·기업 중심으로 정례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거리감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재외동포의 경우, 문화적·언어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외국인’으로 인식되어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다(윤인진 외, 2020; 윤인진 외, 2015). 따라서, 재외동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 이주 배경에 대한 이해 교육, 국민-재외동포 간 상호교류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이 한국 사회 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증진 캠페인, 한국인과 재외동포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초청 프로그램, 미디어 내 재외동포 이미지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주노동자와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는 단순히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 교육, 사회적 연대 형성, 제도적 차별 해소와 더불어 미디어 내 이주민 재현 방식 개선 등 다층적인 인식 개선 전략을, 각 주무 부처가 공동 기획하고 서로 연계하는 방식이 고민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 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신뢰 기반 확충을 통한 난민 수용 태도 개선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난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있어 사회 신뢰와 공적 신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는 난민과 같은 인도주의적 이주 집단에 대한 다문화 수용 여부가 단지 개인적 태도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 제도에 대한 안정적 기대감, 사회에 대한 신뢰 등의 수준에 따라 좌우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난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적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 전반의 제도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예컨대 법무부는 난민 정책의 결정 과정과 집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정보 공개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설명회, 정책 브리핑, 지역 커뮤니티 미디어를 통해 공적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난민 수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통해 수용 태도의 긍정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처럼 비수도권 지역의 난민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중심의 집중적 전략보다는 지역 기반 분산 정착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고용노동부·지자체가 협력하여, 난민의 언어능력, 직업 경험, 가족 구성 등 개별 특성과 지역 노동시장 수요를 함께 고려한 '지역-난민 맞춤형 정착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지자체의 수용 역량을 반영한 재정 지원, 커뮤니티 기반 정착 프로그램, 공공기관-주민-시민사회 간 협력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Re:Match 프로그램은 난민의 선호와 지역 조건을 모두 반영해 정착지를 매칭하고, 그 과정에서 공적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난민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낸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Re:Match, 2025).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해 정책 신뢰와 지역사회 수용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이터 기반의 정착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공 중심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 난민 그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단순한 선입견 차원을 넘어, 남녀 간 자녀 교육, 가족 안전,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서 비롯된 위협 인식 차이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Kobayashi and Tanaka, 2025).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우선, 자녀를 둔 여성 또는 지역 커뮤니티 내 여성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이주민 이해 교육, 다문화 체험 콘텐츠, 공동 육아 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 여성 공동체, 예를 들어 학부모회,

공동 육아 나눔터, 여성센터 등을 기반으로, 이주민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줄이기 위한 대화형 프로그램이나 상호 교류 기회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여성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여성정책 자문단, 다문화위원회 내 여성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도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국민과 이주민의 접촉 경험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려야 한다. 연구에서 외국인 접촉 경험이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과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든 올포트(Gordon Allport)의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Allport(1954)는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긍정적인 접촉 경험이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상호 이해와 수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후 다문화 수용성과 사회통합 연구에서도 핵심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이주민과 국민 간의 비형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접촉을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며, 특히 접촉 기회가 부족한 계층과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우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외국인 학부모 참여 수업, 언어·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기의 긍정적 접촉 경험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 생활권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내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축제, 요리 교실, 언어 교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일상적 접촉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 외국인 비집중 산업의 근로자 등 외국인과의 접촉이 적은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회통합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은 수혜자뿐만 아니라 참여자이자 기획자로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반을 쌓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구조와 제도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하며, 지자체·교육기관·문화기관 등 실행 주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분담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상 속 접촉의 질과 양을 동시에 높이고, 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수용 태도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횡단면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변수 간 인과관계를 단정 짓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추세나 변화 양상을 분석하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신뢰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측정하였으나, 2차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변수 구성이 제한적이었고, 신뢰와 사회적 지지 등 일부 요소에 국한되어 있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일부 변수는 개념의 복잡성을 정밀하게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모형의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 역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다차원적 속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 설계와 측정 도구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 유무'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접촉의 빈도, 지속성, 자발성, 상호성, 정서적 친밀도 등 '접촉의 질'과 관련된 미시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량 조사에 더해 심층 면접 혹은 참여 관찰을 병행하는 혼합 연구 설계를 통해, 접촉의 맥락과 질적 특성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 수용성은 개인의 가치관, 사회경제적 조건, 정치 성향, 미디어 노출, 정체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태도이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설계하였으나, 이 외 요인들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설명변수를 포함하여 수용성의 복잡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주민 집단별 맥락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

곽윤경은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사회정책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이주민 복지, 사회통합, 청년정책 및 이주배경 청년, 복지정책 등이다.

(E-mail: aliceykwak@gmail.com)

---

양영미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사회융합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아동 및 청소년복지, 다문화, 지역사회, 돌봄 등이다.

(E-mail: ksci.ymy@gmail.com )

## 참고문헌

- 강서윤, 전희정. (2022). 사회적 자본이 안전인식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6(2), 395-427.
- 고문현. (2011). 난민수용의 실태와 인정절차. *공법연구*, 40(1), 35-62.
- 김은미, 김반야, 서민향. (2014).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사적신뢰와 사회신뢰의 관계: 인터넷상의 교류범위와 인터넷 활용유형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의 교류범위와 인터넷 활용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8(3), 7-47.
- 김이선, 최윤정, 정연주, 장희영, 이명진. (2022).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정숙. (2023). 고등학생의 다문화 접촉 경험, 활동 경험과 난민 수용성 관계에서 사회적 거리감의 매개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4), 185-213.
- 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2014). *달린 대한민국: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김진희. (2019). 한국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비판과 이주민에 대한 편향적 태도 분석. *평생학습사회*, 15(2), 127-153.
- 김현미. (2019. 3. 23.). 예멘 난민 '위기'를 통해 본 인종화와 신인종주의. 신인종주의와 난민: 낙인을 짊어지는 연대는 가능한가. 발표자료. 제63차 사회인문학포럼, 서울.
- 김혜선. (2014). 사회적 자본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희재, 김현숙. (2012).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국민 정체성과 다문화 태도. *동북아 문화연구*, 33, 83-104.
- 곽민정, 함보연. (2023). 귀환 재외동포의 한국에서의 삶 연구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고려인과 사할린동포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5(10), 901-916.
- 곽윤경. (2020).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3(2), 5-26.
- 곽윤경, 김기태, 정세정, 강예은, 김지원. (202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곽윤경, 양영미. (2017). 중학생의 체육활동 참여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0(2), 147-170.
- 남보영, 홍이준. (2021). 외국 이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간접 접촉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3), 181-208.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 아동복지학*, 22, 127-159.
- 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김금미, 조영기, 류정아. (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 박지한, 김동현. (2024). 이주 노동자가 현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임금 수준과 노동시장 긴장도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40(4), 41-55.
- 법무부. (2025). *출입국통계*.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 법무부. (2024).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 경기: 법무부.
- 배영. (2007).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사회자본: 사회자본 논의의 이론적 쟁점과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3(2), 54-81.
- 서정경. (2014). 중국동포의 귀환과 한국사회의 과제: '중국의 조선족과 한국의 중국동포를 넘어: 중국의 조선족과 한국의 중국동포를 넘어. *디아스포라연구*, 8(1), 71-94.
- 신민형. (2015).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개인적 및 정책적 수용성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신학진. (2013). 중년의 애매모호수용성이 다문화접촉을 매개로 외국인과 이주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논문집]. 한국생활과학회 2013년 학술대회, 281-283.
- 안상수, 민무숙, 김이선, 이명진, 김금미. (2012).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양계민. (2010).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4(1), 111-128.
- 우명숙, 남은영. (2024). 일을 통한 상승 이동 인식과 이주민 수용성의 관계. *한국사회*, 25(2), 3-38.
- 윤경훈, 강정인. (2019). 한국 다문화주의 연구의 다문화 정책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맥락 없는 다문화주의? *한국정치연구*, 28(2), 89-116.
- 윤인진, 권일남, 김태균, 배진숙, 송영호. (2015).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 한민족의식, 다문화 수용성, 접촉 경험의 효과. *통일문제연구*, 27(1), 31-68.
- 윤인진, 팽정. (2021). 한국인과 대만인의 다문화 수용성: 국민정체성과 국가자긍심의 효과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4(1), 245-288.
- 이소현. (2023).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 세종: 국토연구원.
- 이정연, 엄재근. (2019). 다문화수용성이 난민수용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23(4), 123-148.
- 이재철. (2017).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및 인식 분석. *정치정보연구*, 20(2), 275-304.
- 이영찬. (2007). 사회적 자본, 지식경영, 그리고 조직성과 간의 인과관계. *정보시스템연구*, 16(4), 223-241.
- 이형하. (2014).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관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9(11), 193-202.
- 이희창. (2023).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 선진 OECD 8개 회원국과 14개 개도국과의 비교. *한국공공관리학보*, 37(4), 97-124.
- 임양준. (2012). 한국거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문의 보도 경향과 인식연구: 조선일보, 한겨레, 경인일보, 부산일보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4), 419-456.
- 임혁, 이효영. (2012). 이주노동자의 레질리언스와 정신건강: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9(5), 13-26.
- 윤인진, 손지혜, 이종원. (2020). 귀환 재외동포와 동포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디아스포라연구*, 14(1), 7-46.
- 윤인진, 권일남, 김태균, 배진숙, 송영호. (2015).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 한민족의식, 다문화 수용성, 접촉 경험의 효과. *통일문제연구*, 27(1), 31-68.
- 장주영, 허정원. (2024). 지역 내 이주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서울: 이민정책연구원.
- 전경숙. (2021).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19, 309-368.
- 전소희, 김은서. (2023).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 접촉경험과 다문화교육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4(2), 179-206.
- 정동재. (2023). 이민자, 체류 외국인을 지역 주민으로 끌어안기. *월간공공정책*, 214, 62-65.
- 정현일. (2023). 한국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유형. *사회사상과 문화*, 26(3), 289-332.
- 한국행정연구원. (2023).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한정훈. (2019).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 불평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58(1), 123-159.
- 허겨운, 정혜진. (2020). 사회적 자본이 시민들의 이민자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9(4), 145-171.
- 허윤철, 임영호, 조운용. (2017). 지역과 국가수준의 사회자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디아스포라연구*, 11(2), 51-88.
- 황정미. (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 (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 (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4), 152-184.
- 행정안전부. (2023).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 <https://www.mois.go.kr/firt/a01/firtMain.do>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Bhandari, H., & Yasunobu, K. (2009). What is social capital?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concep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37(3), 480-510.
- Burgoon, B. (2014). Immigration, Integration, and Support for Redistribution in Europe. *World Politics*, 66(3), 365-405.
- Çınar, P. T. (2025). Mig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gender and parenting roles: Syrian and Afghan women in Turkey.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09.

- Herreros, F., & Criado, H. (2009). Social Trust, Social Capital and Perceptions of Immigration. *Political Studies*, 57(2), 337-355.
- Kobayashi, Y., & Tanaka, S. (2025) How gender shapes attitudes and concerns about immigration. *Politics, Groups and Identities*, 13(3), 576-595. <https://doi.org/10.1080/21565503.2024.2378023>
- Kymlicka, W. (2017). Multicultural states and intercultural citizens 1. In *Citizenship Rights* (pp. 183-205). Routledge.
- Leana III, C. R., & Van Buren, H. J. (1999).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nd employment practic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3), 538-555.
- Ojukwu, C., & Oni, E. O. (2017). Multiculturalism, racialism and the dilemma of the African-American in the twenty-first century. *AFFRIKA Journal of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7(1), 111-126.
- Putnam, R. D. (2007). E Pluribus Unum: Diversity and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2006 Johan Skytte Prize Lecture.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0(2), 137-174.
- Ramakrishna, D. (2013). Multiculturalism in America, Australia and India. *Social Change*, 43(1), 99-110.
- Re: Match. (2025). *Our core idea – Innovative approaches to solidarity*. [https://rematch-eu.org/?utm\\_source=chatgpt.com](https://rematch-eu.org/?utm_source=chatgpt.com)
- Rosado, C. (1996). *Toward a definition of multiculturalism*. Retrieved from [http://rosado.net/pdf/Def\\_of\\_Multiculturalism.pdf](http://rosado.net/pdf/Def_of_Multiculturalism.pdf)
- Schweitzer, R., Perkoulidis, S., Krome, S., Ludlow, C., & Ryan, M. (2005). Attitudes towards refugees: The dark side of prejudice in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7(3), 170-179.
- Simmons, S. J., Wittig, M. A., & Grant, S. K. (2010). A mutual acculturation model of multicultural campus climate and acceptance of diversity. *Cultural diversity & ethnic minority psychology*, 16(4), 468-475.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24).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Online Edition. <https://population.un.org/wpp>
- Uslaner, E. M. (1999). Trust but verify: social capital and moral behaviour. *Social Science Information*, 38, 29-56.
- Uslaner, E. 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University of Maryland Press.

# Perceived Social Capital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in South Korea:

A Comparative Study of Migrant Workers, Refugees and Overseas Koreans

Kwak, YoonKyung<sup>1</sup> | Yang, Youngmi<sup>2\*</sup>

<sup>1</sup>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sup>2</sup> Korea Social Convergence Institute

\* Corresponding author:  
Yang, Youngmi  
(ksci.ymy@gmail.com)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perceived social capital among Korean adults on their multicultural acceptance of three distinct migrant groups: migrant workers, refugees, and overseas Koreans. Specifically, it seeks to examine how multicultural acceptance is shaped differently across these migrant categories by focusing on the sub-components of social capital. The study utilizes the raw data from the 2024 National Survey on Social Cohesion and condu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based on a sample of 3,011 Korean adults. The results reveal that both social trust and institutional trust exert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toward refugees, where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for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Koreans. Furthermore, socio-demographic factors, including gender, generation, educational attainment, subjective income level, and frequency of contact with foreigners, were found to have varying influence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depending on the type of migrant group.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heterogeneous nature of multicultural attitudes within Korean society and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to the development of targete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different migrant populations.

**Keywords:** Social Capital, Multicultural Acceptance, Migrant Workers, Refugees, Overseas Koreans, Social Integration